

**「옛 해운대역! 상업개발 아닌,
공원조성으로 주민의 품에..」**

문 현 신 의원

부산시, 옛 해운대 철도역 정거장 부지도 공원화 추진

총 2만5391㎡ 규모, 공공개발 나서
국토부 소유-상업개발 승인만 남아
롯데시장, 여당에 전면 중단 요구 방침

부산시가 옛 해운대 철도역사에 이어 정거장 부지 일대도 공공개발을 추진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2일 열릴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에 “옛 해운대역 일대의 공원화를 위해 정거장 부지에 대한 정부의 상업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옛 해운대역사는 지난 1월 이를 관리하는 코레일이 상업개발(본역사와 부속역사 2개동 포함 4631㎡)을 포기(국제신문 지난 1월 18일자 1면 등 보도)해 시가 시민공원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역사뿐 아니라 해운대역 일대 정거장 부지(2만5391㎡)도 공원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소유자인 국토교통부(철도시설관리공단)가 상업개발을 추진 중인데, 정부를 설득해 공공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는 사업주관자(주성도이엔지, 한국전자금융주)가 지정돼, 개



옛 해운대역사 내 정거장 부지. 국제신문DB

발에 관한 국토부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국토부가 최종 승인하면 출자회사(SPC)가 설립될 예정이어서 공공개발은 물 건너가게 된다.

앞서 코레일은 2015년 7월 옛 해운대역사 부지 4631㎡에 30층이 넘는 호텔형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를 조성하려고 백상건설 등 3개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은 2016년 1월 코레일과 토지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상업개발의 전망이 드러나면서 이 사업은 시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서병수 전 시장이 제동을 걸었다. 이어

서 시장은 지난해 해운대역사 부지는 물론 바로 옆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정거장 부지도 매입하거나 임대해 공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이 대표에 금융·해양·영화영상 분야 수도권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적극 이전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7개 금융기관 등 부산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와 민주당이 진행하는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도 부산시 국비 확보를 위한 자리다. 이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홍익표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정부예산안 편성에서 누락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전동차 교체 ▷도시철도법 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부산국제영화제 범국가적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지역거점 구축 등에 필요한 국비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선정 김화영 기자 sjlee@kookje.co.kr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논란 재연

성도이엔지-한국전자금융, 개발사업 법인설립 초읽기

국제신문 이승훈 기자 thinkboy7@kookje.co.kr | 입력 : 2018-11-14 20:17:59 | 본지 1면

- “2013년 상업화 협약 유효”
- 철도시설공단 억지주장도
- 시 “시민반대 땀 추진 불가”

부산시가 공원 증지로 공공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2만5000㎡)가 상업 개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발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개발 사업 주관자인 성도이엔지와 한국전자금융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출자 사업 승인을 받았다. 정거장 부지를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앞서 지난해 7~10월 개발 사업 주관자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성도이엔지 등과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성도이엔지 등은 이에 따라 현재 출자자를 모집 중이며, 올해 안에 SPC 설립을 완료해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의 공공개발이 물 건너가고, 사실상 상업 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해운대역사 일대를 공원화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약속도 물거품이 된다.

이런 와중에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내 상업 시설 설립 내용을 담은 과거 협약서가 유효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일부를 공원화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한 2013년 시와 공단이 맺은 양해각서(MOU)는 유효하다”고 했다. 2013년 허남식 전 시장 당시 “동해남부선 철도 자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협약서”의 부속서에는 철도시설공단 개발 사업의 하나로 “옛 해운대역 승정역 일원에 상업 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은 부글부글 끓는다. 인근 해리단길 상인들은 “센텀시티부터 송정까지 이어지는 옛 철길의 중심에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며 “서병수 전 시장에 이어 오 시장도 공원화를 약속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대구 1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옛 해운대역사 앞에서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는 ‘공원화 추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도이엔지 측은 “SPC가 설립되지 않아 (상업 시설 건립은) 정해진 게 없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시 관계자는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시민과 함께 사업 방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개발 사업자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시민이 반대하면 인허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thinkboy7@kookje.co.kr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논란 재연

성도이엔지-한국전자금융, 개발사업 법인설립 초읽기

국제신문 이승훈 기자 thinkboy7@kookje.co.kr | 입력 : 2018-11-14 20:17:59 | 본지 1면

- "2013년 상업화 협약 유효"
- 철도시설공단 억지주장도
- 시 "시민반대 땀 추진 불가"

부산시가 공원 증지로 공공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2만5000㎡)가 상업 개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발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개발 사업 주축자인 성도이엔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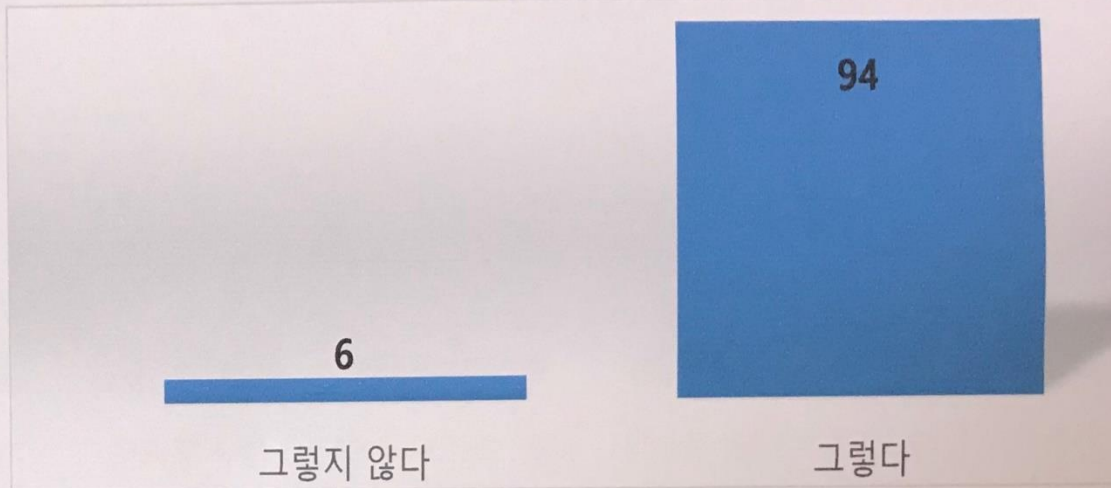
기됐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일부를 공원화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한 2013년 시와 공단이 맺은 양해각서(MOU)는 유효하다"고 했다. 2013년 허남식 전 시장 당시 '동해남부선 철도 자산의 효율적 활용 관리 협약서'의 부속서에는 철도시설공단 개발 사업의 하나로 '옛 해운대역 송정역 일원에 상업 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장에 이어 오 시장도 공원화를 약속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대구 1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옛 해운대역사 앞에서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는 '공원화 추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도이엔지 측은 "SPC가 설립되지 않아 (상업 시설 건립은) 정해진 게 없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시 관계자는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시민과 함께 사업 방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개발 사업자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시민이 반대하면 인허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thinkboy7@kookje.co.kr

옛 해운대 역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가?



약 80년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옛 해운대 역사와 철도부지는

시민에게 환원(94%)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논란 재연

성도이엔지-한국전자금융, 개발사업 법인설립 초읽기

국제신문 이승훈 기자 thinkboy7@kookje.co.kr | 입력 : 2018-11-14 20:17:59 | 본지 1면

- “2013년 상업화 협약 유효”
- 철도시설공단 억지주장도
- 시 “시민반대 땀 추진 불가”

부산시가 공원 증지로 공공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2만5000㎡)가 상업 개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발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개발 사업 주관자인 성도이엔지와 한국전자금융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출자 사업 승인을 받았다. 정거장 부지를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앞서 지난해 7~10월 개발 사업 주관자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성도이엔지 등과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성도이엔지 등은 이에 따라 현재 출자자를 모집 중이며, 올해 안에 SPC 설립을 완료해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의 공공개발이 물 건너가고, 사실상 상업 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해운대역사 일대를 공원화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약속도 물거품이 된다.

이런 와중에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내 상업 시설 설립 내용을 담은 과거 협약서가 유효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일부를 공원화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한 2013년 시와 공단이 맺은 양해각서(MOU)는 유효하다”고 했다. 2013년 허남식 전 시장 당시 “동해남부선 철도 자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협약서”의 부속서에는 철도시설공단 개발 사업의 하나로 “옛 해운대역 승정역 일원에 상업 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은 부글부글 끓는다. 인근 해리단길 상인들은 “센텀시티부터 송정까

기 이역지니 옛 역가의 중심에 조화될 만도 않겠다”는 양수를 마크 이준호 시장이 “시장에서야 시민복수

주인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시 관계자는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시민과 함께 사업 방안을 만

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개발 사업자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시민이 반대하면 인허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